

‘학교급식사고’ 식중독 의심환자 350명

도의회 교육위 긴급점검 발생 학교 방문·업체 조사 집중 예방관리 강력 주문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7일 학교급식으로 인해 도내 다수의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350여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를 긴급점검하는 현지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최영규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

위 소속 의원들은 익산시 소재 전북 유아교육진흥원과 전북과학교육원 2곳의 현지의정활동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 익산 부천중학교를 급히 방문해 점검한 것이다.

의원들은 반복되는 학교급식 위생 사고에 심각한 우려의 뜻을 전하며 도내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위반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하는 등 전북도교육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식중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지만 이번 학교급식 사고를 보면 제대로 관리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가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8개 교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6일에 이어 이날 5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350여명이 입원과 통원 치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영규 위원장은 “해당 급식을 제공받은 학교가 다수 있기 때문에 현

재로서는 의심환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교육청은 나머지 학교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긴밀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도내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도내 학교 급식시설 청소·살균·소독 등 집중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면서 “특히, 학교장을 비롯해 영양사와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진단을 진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올해 종전선언 이뤄지길”

印尼 언론과 인터뷰 “연말까지 진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언론 매체인 콤포스(Kompas)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떠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관련국 간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종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하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문제는 정상들 간의 합의를 진정성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 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등 상용조치를 둘러싸고 북미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미 간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책의 가장 기본은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남한과 북한, 미국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역사적인 정상간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여정이 시

작됐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2기 사회정책이자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사람 중심의 철학과 리더십에 힘입어 아세안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고 있다”며 “나 또한 사람 중심 경제로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관계의 핵심 축은 바로 사람”이라며 양국 간 활발한 문화 교류와 관련해 “국민들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강력한 요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하더라도 역대 최초로 아세안에 특사를 파견했고 아세안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를 첫 국민방문지로 찾았다”며 “양국 협력의 범위는 이미 접두기와 잠수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2022년까지 교역규모를 3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 공작기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따뜻한 환대와 열빈 응원으로 아시아인의 자긍심을 높여준 인도네시아 국민 여러분께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며 “남북선수단의 공동입장과 남북단일팀 참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조코위 대통령님과 아시안게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각별한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북미관계와 북핵의 전망은? 김중대 의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북미관계와 북핵 전망’ 강연에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인보 특별보좌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박병석 의원, 문정인 특보, 더불어민주당 박한정, 정의당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에 도의회 김대중 선출

전북도의회 김대중 운영위원장(정읍2·사진)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김대중 운영위원장(정읍2·사진)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8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를 운영해 갈 예정이다. 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은 회원 상호간 협의를 위한 사항 및 협의회 실무를 총괄 검토하는 직책이다. /김진성 기자



유성엽 “판문점 선언 비준 협력 환영”

김관영 대표연설 입장밝혀 경제·대북 인식 다르지 않아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사진)이 지난 6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마지막날 발표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하여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자세를 환영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민주평화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무원 일자리 대신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인식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이 판문점 선언 비준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에 있어 중요한 상징이 될 판문점 선언에 대하여 누구보다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라며, “단지 한국당 의견이라면 무조건 동조하는 ‘한국당 바라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바른미래당의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특히 대북 인식과 경제 정책 관련해서 평화당과 많은 공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서로 협력해 갈 것을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국토위, 12일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 논란 현안 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규 택지 개발 정보 공개 논란 등 현안 질의에 나선다.

국토위원장이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 국토위원단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제 신도시 8곳 신규 택지 발표가 나가고 나서 한국당 의원들로부터 상임위 개최 요청이 있었다”며 “그 문제를 윤관석 민주당 간사, 박덕흠 한국당 간사,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합의

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은 오는 10일 신 의원 논란과 관련한 원포인트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협치를 위해 이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12일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된 후 의사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윤관석 간사는 상임위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열어도 여당은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며 “아량만 현안 질의를 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12일 전체 상임위를 열어 그날 현안 질의를 포함한 서로 이 문제를 타결하는 걸로 한국당 의원들끼리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